

제10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7. 1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 14:40~18:0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30호)

이 명 순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36호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37호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주총회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 내용을 담당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으나, 해당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년, 2020년 2개 연도에 대해 부과기준 제1조 라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동일하게 1건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미숙지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외감법 제8조제5항에 보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규정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음. 외감법 같은 특별법을 사외이사가 인지하고 업무를 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아주 미소(微小)한 조직임. 저희의 과오가 고의가 아니라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2017년 중에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였으며, 2020년초에 상법상 일반회사로 변경을 했음. 그런데 여전히 투자목적회사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 회사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외감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비하지

않았고, 동 감사인 역시 2022년 회계감사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지 않았음. 회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능력 및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과태료 처분은 면제했고 감사인은 과태료가 조치되었음. 저희는 회사가 사업목적은 변경해서 일반회사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목적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재직 임직원이 0명이고 회사의 실무 및 재무제표 작성을 계열사의 자금팀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그 운영의 실익이 낮으며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04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보고안건 제32호 『○○의 ○○○○○○○ ○○과 ○○ ○○ ○○○의 ○○○ ○○○○ ○○○○ ○○○○ ○ 보고』를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38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반대매매 관련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의 내부 상황과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면 본 건은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수였음. 그와 관련된 것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인정됨. (주)○○○은 △△△ 회장이 2017년 5월경에 인수한 회사임. 당시 (주)○○○이 2017년 11월23일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7년 11월9일과 11월22일에 ▷▷▷외 2인과 ▶▶▶가 경영권분쟁의 상대방인데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음. 물론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많았고 이중의 일부는 가처분신청이 취하가 되었음. 그러나 이들과는 종전에도 계속 경영권 분쟁인 상황 이어서 △△△ 회장의 입장에서는 (주)○○○의 의결권 주식

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 본 건 시세조종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래의 시기가 2017년 11월24일부터 약 보름간, 거래일은 한 10일 정도인데 그러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반대매매주식의 담보비율이나 반대매매 방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임. △△△ 회장이 의결권 주식 매집을 부탁해서 옆에 있는 ▽▽▽가 ◁◁◁, ◀◀◀ 등 지인들을 통해서 매집을 부탁했고 일부는 1인당 1억 원의 돈을 투자했고 신용으로 매수했음. 그리고 2017년 12월초 경에 △△△ 회장에 대해 좋지 않은 뉴스(무자본 M&A)가 방송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매집은 실패로 돌아갔고 손실을 떠안았음. 결국 이 사건 금감원 고발내용이 △△△ 회장이 ▽▽▽에게 부탁을 해서, 또는 공모를 해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하는데 △△△ 회장 본인이 지시를 했는데 본인에 대한 악재방송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시세조종한다는 것은 보통 거래의, 종전의 시세조종 일반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거래금지위반과 관련해서 결국 이것이 반대매매로 던져서 ○○○○투자조합이 싸게 받았다는 취지인데 그 당시 ■■■이 한 행동임. ▽▽▽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임. 반대매매이든 시세조종이든 이익을 취하는 자는 △△△ 회장과 매수를 했던 ■■■ 대표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자체도 △△△이 지시하고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자들이 대주주이고 매수회사인 ○○○○투자조합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이해관계에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 회장이 별건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

■를 상대로 전화로 확인을 했다는 취지만 있는데 보통은 IP가 나오더라도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음. 지금 고발내용은 공모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도 안 한 사람과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부탁을 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알고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고 반대매매는 어떤 상황인 것인지를 사전에 범행의 배경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고 행위자가 ■■라고 지목을 한 것인데, 지금 저희는 잘 모름. 그러니까 ▽▽▽ 부회장만 고발을 당하는 입장인 것인지, △△△과 ■■에 대해서도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은 바로는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일방적으로 ▽▽▽ 혼자 중간에 끼어서, 이해관계가 (주)OOO이나 ●●●●투자조합의 직원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장 이해관계에 있는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인지를 잘 모르겠음.

- (위원) 증권사로부터 4회에 걸쳐서 유선경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에게 알리셨는지?

▶ (진술인) 받은 적이 없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조사내용을 보니까 증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유선경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함.

- (보고자) 보통 유선경고가 계좌주한테 가는데, HTS 등으로도 안내하기도 함.
- (위원) 아까 진술인들이 △△△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 (보고자) ■■■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것 아니냐고 했는데 ■■■는 당연히 불러서 문답을 진행했음. 다만, △△△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Covid-19 때문에 문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위원) 조치대상자를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최근 증선위는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의무위반에 대해서 조합 대신 대표보고자를 조치할 것을 의결(‘22.7.13. 제13차, 보고안건 제33호)하였음. (주)OOO 건은 2012년 11월 자조심 심의 완료된 건이고 오늘 증선위에 상정 중임. 일반적으로 자조심 의결 후 증선위 상정 전에 조치대상자를 변경하면 금감원 재조사 및 사전통지 등을 거쳐서 상당기간 소요가 됨. 다만, 본 건은 법원의 판결로 ○○○투자조합의 실질지배자가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을 고발조치하면서 ○○○투자조합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금감원에서는 둘 다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증선

위의 개선방안에도 배치되지는 않음. 다만, 투자조합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선위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음.

- (위원) 종전에는 조합을 대상으로 조치를 해 왔는데 민법상 투자조합을, 형식적인 조합을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은 실질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고 그에 따라서 조합 대신에 GP나 대표조합원을 조치하는 것으로 증선위에서 의결했음. 이것이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인데 그 '위반한 자'가 되려면 자연인이 되었던 법인이 되었던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민법상 조합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나 대표조합원을 제재하는 것으로 간 것임. 양벌규정이 되려면 그 자가 속한 단체가 되거나 본인이 되거나 본인 대리관계가 되거나 소속한 임직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 조합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배경이 있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법상 조합은 설립이나 해체가 굉장히 간이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해체하면 끝임.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음. 어차피 투자조합이라는 것은 옆에 붙어 있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사람을 조치하면서 고발하면 ●●●●●투자조합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내용은 같이 서술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임. 그래서 소급 적용의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위원장) 제138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민법상 투자조합의 성격을 감안할 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추가조치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투자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39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 제가 지목이 되어서 억울함. ◆◆◆가 주식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작년에 금융감독원 조사받을 때 알았음. 제가 금융감독원의 ◀◀◀ 수석검사역에게도 따졌지만 저를 왜 지목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임.

▶ (진술인) ◆◆◆임. 저는 그때 ◀◀◀ 수석검사역에게 말

숨드렸듯이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오히려 저보다는 ○○○○라는 분을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이 최종 진술임.

- (위원) ◆◆◆는 본인명의로 (주)□□□□□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것이 본인의 주식인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으로 산 것인지?

▶ (진술인) ◆◆◆이라는 사촌형님이 “○○○라는 분이 이러이러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잠깐 빌려드려라. 별 문제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이 전부이고, 그 사람이 언제 팔라고 했을 때만 해서 돈만 전달했을 뿐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매수자금 3억 원은 ■■■의 지인 ○○○이 대표인 (주)○○○○○○○○의 한국증권 계좌에서 ◆◆◆이 직접 수표로 인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출해서 ◆◆◆한테 줬다는 것인지?

- (보고자) ◆◆◆이 직접 증권사에 가서 출금전표 쓰고 찾았음.

- (위원) 수표로 찾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에 넣어서 그것으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매도자금을 다시 각각 ㉠㉠㉠, ㉡㉡㉡, ㉢㉢㉢한테, 그러니까 ㉢㉢㉢은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과 ㉡㉡㉡한테도 계좌로 송금을 했는지?

- (보고자) 수표로 줬음.

○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수표나 계좌는 돈의 흐름이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다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주식매매는 ㉡㉡㉡의 NH증권 계좌가 매수계좌이고, 매도계좌는 ㉡㉡㉡의 한국증권 계좌임. 매수·매도계좌를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매매했음. 또한, 매수자금의 출처는 (주)㉢㉢㉢㉢㉢의 한국증권 계좌임.

○ (위원) 실제 심부름을 했다는 ㉡㉡㉡는 ㉢㉢㉢의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에 대해 조사해 보셨는지?

- (보고자) ㉢㉢㉢한테 진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과 술자리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함. 또 이 자금이 ㉢㉢㉢와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음. ㉢㉢㉢와 아까 말씀드린 ㉣㉣㉣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특별히 자금관계에 나타난 부분도 없음.

○ (위원) 주식 매수자금 3억 원이 한국증권 (주)㉢㉢㉢㉢㉢ 계

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가 과거에 이 계좌를 이용했던 것도 맞는지?

- (보고자) 3번 정도 거래가 있었음.

○ (위원) 대상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재무적 투자자(FI)로 먼저 사고 나중에 (주)△△△△△이 이것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주)◇◇◇◇◇로부터 (주)△△△△△이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해 오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해 보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주)△△△△△도 수사기관에서 차제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통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사항 정보로라도 기재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참고사항을 넣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음.

○ (위원장) 제139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주)□□□□□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지분의 형식적 소유자인 (주)◇◇◇◇◇ 외에 해당 지분 인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결과적

으로 인수했을 개연성이 높은 ▼▼▼ 등이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규정을 참고하여 ▼▼▼ 또는 (주)△△△△△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7시 47분 정회)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17시 52분 속개)

□ 의결안건 제130호 『삼성물산(주) 등 693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제130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의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 조치안은 “혐의 없음”으로 수정 의결하겠음. 금융위 소관과는 한국거래소와 협조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활동도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04분 폐회)